

시장기구와 지속가능한 개발

이 정 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교수)

환경오염은 우리 인간 행위의 결과이다.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신자세 및 행태를 개조하지 않고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요원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된다. 인간의 행태를 개조하는 통상적인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인간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의 경우, 자연은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며 우리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해 먹어야 할 대상이라는 식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자연관을 탈피하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을 제외한 생태계의 식구들도 그 자체로서의 존재가치를 가진다는 식의 생태중심주의 자연관을 가지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어야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환경보호론자들로부터 익히 듣는 주장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환경우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나 대책으로는 각종 환경교육, 환경개선 캠페인, 환경관련 각종 홍보활동을 꼽을 수가 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들을 담은 소책자가 한 때 미국에서 베스트 셀러가 된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책은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들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환경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은 초보단계이기는 하지만 환경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개혁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일에 걸쳐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로 환경교육이나 환경에 대한 홍보를 통한 시민의 의식개혁은 단시간에 효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에 걸쳐 서서히 효과를 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식과 실천은 별개의 것이어서 환경의식이 투철하다고 행동도 환경우호적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아마도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이익 앞에 환경의식이 침묵하는 경우가 오히려 정상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교육이나 환경의식 개혁을 위한 홍보도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에는 틀림 없을 것이다.

인간의 행태를 바꾸는 다른 방법은 인간의 가치관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주로 인간 행위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공해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공해기업은 갑자기 환경의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세금이 무서워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유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하는 방법을 흔히 간접개입 방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의 대표적인 것으로 요즈음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환경세 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위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물질 배출의 자발적 억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보조금제도, 그리고 최근들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래가능배출권 제도 등이 있다. 이런 제도들은 요컨대 환경오염원인자들로 하여금 오염물질의 배출, 다시 말해서 환경의 이용에 대해서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시장기구를 통한 방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경제적 유인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방법들과 같이 인간 행위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란, 말하자면, 개인이 당면하는 객관적 제약조건을 환경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 혹은 시장기구를 통한 방법은 특히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매우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주창되어 왔다.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환경세는 이미 100여년 전에 영국의 경제학자 피구교수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이렇게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시장기구를 통한 방법을 강력하게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매우 오랫동안 외면되어 왔다. 예를 들면, 피구교수가 제안한 환경세를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에 거의 없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가 주로 의존해오던 정책은 정부의 직접규제이었는데, 이 정책이 별로 큰 효과를 올리지 못하게 되자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경제적 유인제도라든가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지난 1992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되었던 유엔환경개발회의가 ESSD 즉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제적 유인제도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강조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지속가능개발이 구체적으로 과연 어떤 것인가는 아직까지 그리 명확하

지 않으나 이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의 보고서는 지속가능개발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 이 정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지속가능개발이란 세대간의 형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이다. 이 지속가능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리오지구환경선언과 의제21은 경제적 유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역할 및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리오지구환경선언의 원칙16은 원칙적으로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의 비용을 부담케 하는 방법을 고려하면서 각국 정부는 환경오염 비용의 내부화와 경제적 수단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제21의 제8장은 이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은 네 가지 행동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세번째 행동계획이 경제적 수단과 경제적 동기유발 그리고 시장기구의 활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환경법이나 환경규제 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세번째 행동계획은 많은 경우 경제적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이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문제를 다룰 능력을 배가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수단 및 시장을 이용한 방법들을 개발해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선언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동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 또는 미래세대에게 파급되지 않도록 하며 둘째, 자원의 희소성이 가격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의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고 셋째, 경제적 수단과 지속가능개발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1) 이 보고서는 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정의는 이 책의 43쪽에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WCED, Our Common Fu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는 시장원리가 활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행동계획에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동들이 제안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것으로는, 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진작하기 위한 정책의 틀을 세워야 한다는 것, 지속가능개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의 가격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 경제적 수단과 동기유발에 관한 각국의 경험들을 교환한다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의 해결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경제적 수단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강조하면서도 의제21의 제8장은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환경을 가격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음미해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시장기구와 환경문제 리오지구환경선언이나 의제21이 주창하는 지속가능개발이란 기본적으로 경제개발도 이루면서 환경보전도 달성할 수 있음을 전제할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목표의 동시 달성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시장기구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경제학도 환경을 보전하면서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있음을 굳게 신봉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기구의 활용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끈다. 달리 말하면, 경제학은 시장기구의 맹점을 보완하여 이를 잘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이러한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 인간 사회의 물질적 토대는 끊임 없는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다. 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은 끊임 없는 물질의 흐름을 바탕으로 영위된다. 인간은 필요한 각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마다 자연으로부터 물, 석탄, 철광석, 목재, 석회석 등 수없이 많은 종류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연자원들을 채취한다. 그러면 이렇게 채취된 자연자원들은 각종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용되고 이 재화들은 각 개인에게 분배되어

소비된다. 재화가 생산과정에서 또는 소비된 후 쓸모 없는 형태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폐기물 또는 쓰레기라고 한다. 우리는 해마다 엄청난 양의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반드시 또한 엄청난 양의 각종 유형, 무형의 폐기물들을 자연에 다시 버리게 된다. 환경으로 부터 경제에 투입된 자연자원의 총물량은 질량보존의 법칙에 의하여 경제로부터 환경에 다시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과 궁극적으로는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해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자연자원이 경제에 투입되는 만큼 또한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폐기물이 환경에 투기될 것이다. 따라서 자연자원의 투입량과 폐기물의 배출량 사이에는 일대일의 상용관계가 있다.

우리는 흔히 대자연으로부터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함으로써 인해서 그 부존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자원고갈의 문제라고 하며,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환경계에 버림으로써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환경오염의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환경으로부터 채취되어 경제로 유입되는 자연자원의 물량과 양태 그리고 경제로부터 환경으로 다시 방출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물량과 양태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은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느냐가 곧 경제로 유입되는 자연자원의 물량과 종류를 결정하면서 또한 환경에 버려지는 환경오염물질의 물량과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으로 자연자원의 고갈이 심해졌다는 것은 곧 우리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자연자원의 고갈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환경오염이 심해졌다는 것은 우리의 생산과 소비활동이 환경오염이 심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환경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주장: 자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은 마구잡이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

라 어떤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자연자원 고갈의 정도와 양태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와 양태는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자연자원 고갈의 정도와 양태 그리고 환경오염의 정도와 양태 역시 수요-공급의 법칙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원리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경제활동의 규모와 양태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경제활동이 어떤 신호에 따라서 마치 사전에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 신호란 각종 상품의 가격이라는 이름의 신호이다. 달리 말하면, 가격체계라는 신호이다. 예를 들어 보자.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이 이윤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을 잘 해야 한다. 그들이 손익계산을 할 때 가장 주의깊게 쳐다보는 객관적 지표는 그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 그리고 그들이 고용하는 각종 생산요소들의 가격, 이 두 가지 종류의 가격이다. 하나는 수입에 관련된 가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출에 관계되는 가격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기업이 하는 일이란 이 두 종류의 가격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윤을 최대한 짜내도록 각 생산요소의 고용량과 생산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새로운 가격에 맞추어서 생산량과 생산요소의 고용량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가격, 예컨대, 임금이라도 오르는 날이면 판을 새로 짜야 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소득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만족을 얻으려면 각 소비자는 자신이 사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알고 이에 맞추어서 상품의 구매량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이 상품의 구매량은 줄이고 그 대신 다른 상품의 구매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돈 씹씹이를 조정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가

격체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는 망하게 되어 있다. 각 기업이나 각 소비자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체계를 냉엄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원자재 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인건비가 비싸면 비싼대로 각 기업은 이에 맞추어 기업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원자재 값이 갑자기 너무 비싸져서 문을 닫아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쌀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집값이 비싸면 비싼대로 각 소비자는 이에 맞추어 생계를 꾸려나갈 수 밖에 없다.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마치 춤판에서 부르스곡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부르스를 추다가 음악이 탱고곡으로 바뀌면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이에 따라 탱고를 추어야 하듯이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모든 기업과 모든 소비자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따라 장단 맞추어 웃고 울어야 하는 현실을 마르크스는 상품물신주의의 이름으로 비웃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자유경쟁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볼 수 있다.

주장: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각 기업의 생산활동과 각 소비자의 소비활동은 가격체계의 신호에 맞추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들의 경제활동의 결과인 환경오염도 그들에게 주어진 가격체계의 신호에 맞추어 행동한 결과이다. 공해업체를 포함한 기업이나 소비자는 다만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적응하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비록 기업과 소비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격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한 그런것에 적응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환경오염이 사회적으로 지나치다고 하면, 우리 나라의 상품의 가격과 생산요소의 가격이 매우 그릇되었음을 의미 할 수 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환경문제에 관한 한 시장기구의 기능에 무슨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은 공해업체를 악덕기업이라고 말한다. 마치 그들이 일부러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양 생각하기 일수이다. 그러나 경제학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공해업체들의 환경오염은 그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따라 행동한 결과일 뿐이다. 한 나라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는 것은, 그 나라의 가격체계가 그렇게 되게끔 각 기업과 소비자들이 행동하도록 신호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호는 무언가 잘못 됐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각 개별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지금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체계라는 신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까지 일일이 따져보고 경제적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위와 같은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문제가 이와 같이 시장기구의 역할이 부분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환경문제의 해결에 대한 경제학의 대답은 간단해진다. 즉, 시장기구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경제학이 생각하는 환경문제는 사실상 사라지면서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도 보전하는 의미의 지속가능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지속가능개발을 위해서는 시장기구의 기능을 어떻게 보완해줄 것인가? 경제학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이라는 특정 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이 환경의 다른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는 것은 공해업체가 우리의 대기를 각종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이용한 결과 일반시민들이 이 대기를 호흡하는 용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해업체가 환경을 오염물질배출 용도로 과도하게 쓰는 이유는 그 환경의 다른 용도에 미칠 지장에 상응하는 만큼의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제시하는 대책이란 원칙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간단하다. 즉,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의 이용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마치 쌀이나 옷에 가격을 매겨서 유통시키

듯이 환경에도 적정가격을 붙여서 환경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가격을 치르게 하는 것이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만든다면,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는 응분의 가격을 받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학의 입장에서 보면 환경이라는 것도 거래대상의 자원처럼 취급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응분의 가격을 치르게 되고, 반대로 환경의 개선에 기여하는 행위가 응분의 가격을 받게 되는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게끔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환경개선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충실히 고려된 올바른 가격이 통용되도록 정부가 뒤에서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그러면, 이와 같이 보완된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경의 가격은 어떤 성격의 것이며 이런 가격을 통해서 달성되는 지속가능개발은 어떤 성격의 것일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결정된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수요는 이익을 반영하는 개념이고 공급은 비용 혹은 손실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라면에 대한 수요는 라면을 먹음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을 반영하며, 라면의 공급은 라면의 생산에 소모되어 버린 자원들의 가치, 즉 생산비를 반영한다. 환경에 이런 수요-공급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환경에 대한 수요는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각종 이익들을 반영하게 되고 환경의 공급은 환경파괴로 인한 각종 피해나 손실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수요와 결부된 이익이나 공급과 결부된 손실은 도 대체 누구의 이익이요 누구의 손실을 말하는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실제로 시장에서 산 사람의 이익과 판 사람의 손실(생산비)이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시장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골프채의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골프채를 산 사람들과 골프채를 판 사람들 사이의 흥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골프채를 살 의사가 없든지 또는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골프채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환경에 대해서 가격이 붙여진다면 이 가격은 환경에 대한 시장에 참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무리 참여할 의사가 강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시장에 참여할 능력은 물론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시장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환경의 경우에는 시장에 참여할 의사도 있고 돈도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미래세대의 사람들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결정될 환경의 가격은 그들의 복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가격이란 수요가 많을수록 비싸지기 마련인데, 예컨대 미래세대의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결과 환경의 가격이 매우 싸게 결정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현재 세대의 사람들은 신나게 값싼 환경을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 결과 환경이 마구 파괴되면 미래세대들에게 돌아갈 환경의 이익 그 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쩌면 미래사람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최초의 정의를 내릴 때에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지극히 우려한 바이다. 그렇다면, 시장기구를 통한 지속가능개발이란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위주로 한 개발이요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정의한 지속가능개발과는 거리가 먼 개발이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단정적으로만 말 할 수는 없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환경에 대한 가격이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의 직접 간접적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정부는 미래세대들의 대리자로서 환경에 대한 가격이 형성될 때에 그들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나 아

마도 정부의 그러한 역할에는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미래세대들의 취향이나 환경을 이용할 능력 또는 그들이 처할 여건 등에 대하여 하등의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정보가 없으니 그들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가 없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정부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다. 현재의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현재 세대들이 선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 세대 사람들의 이익을 무시할 수가 없다. 경기가 조금만이라도 나빠지거나 실업률이 조금만이라도 높아지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조금만이라도 높이는 날이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현재 세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신경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미래세대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봐야 매우 형식적인 정도를 크게 벗어나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경제적 유인제도 혹은 시장기구를 통하는 방법은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과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경제적 유인이나 시장을 통한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환경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점점 더 환경을 상품가치의 차원에서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대자연을 순전히 상품가치로만 인식하게 되면 환경오염이 감소할지 더 악화될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문제를 대하든 그 문제를 대하는 기본 자세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기적이고 공격적인 의식을 환경우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근원적 해결이 요원하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아무리 경제적 유인에 의한 방법이 효과에 있어서 탁월하다고 한들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경제적 유인을 이용해서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자는 발상 자체가 매우 치사할 뿐만 아니라 위험스

럽기조차 하다. 마르크스가 개탄하고 혐오했던 것도 바로 그런 식의 발상이다. 경쟁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쟁을 이용해서 사람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참으로 문제이며, 경제적 유인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이용해서 사람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려는 의도,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란 인간 사이의 경쟁과 경제적 유인으로 움직여지는 참으로 추악하고 비인간적인 사회

라고 마르크스가 갈파했던 것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쟁 그리고 경제적 유인이 지속가능개발의 밑거름이 되는 인간의 도덕적 기반을 잠식해간다면, 지속가능개발의 꿈도 사라지리라는 우려가 경제학에 대한 비판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이러한 도덕적 기반은 결국 끊임 없는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